

공개토론회 자료

본 자료와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은
2007. 3. 12(월) 夕刊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총괄 분야 (I) -

2007. 3. 12(월) 10:00 ~ 12:00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 분야 작업반

동 자료는 '07~'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 분야 작업반에서 준비한
자료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 로 그 램

09:30 ~ 10:00	등록 및 네트워킹
10:00 ~ 10:05	국민의례
10:05 ~ 10:10	개회사 (현정택 KDI 원장)
10:10 ~ 10:15	인사말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10:15 ~ 12:15	총괄분야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역할

사 회 : 현정택 (KDI 원장)

발 표 : 서중해 (KDI 연구위원)

쟁점토론 1 : 동반성장을 위한 성장과 복지의 관계

쟁점토론 2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원배분 방향

쟁점토론 3 :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 론 : 강호인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

고정석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김장호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박혜자 (전라남도청 복지여성국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문형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목 차

토론주제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역할

1. 우리 경제의 변화양상	1
2. 성장 전략 -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7
3. 재정의 역할 변화	10
4.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15
가. 인적자원개발 및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15
나. 기업 환경 및 시장 제도 개선	16
다. 산업경쟁력 강화	18
라. 지역의 자생적 발전기제 구축	21
마. 혁신주도형 성장을 견인하는 기술개발체제	22
바. ICT 개발 및 활용 촉진	24
사. 에너지 확보 및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25
5.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원배분 방향	26
가. 재정투자에 대한 성과평가	26
나. 재정의 성장지원 전략	28
<참고자료 1> 생산성 국제비교	36
<참고자료 2> 자본장비율 국제 비교(미국 = 100)	37
<참고자료 3> G7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 지식경제 발전 지표	38
<참고자료 4> 우리경제의 서비스화 추세 및 향후 과제	41

토론주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역할

1. 우리 경제의 변화양상

- 우리경제의 최근 성장패턴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시현하고 있음.
 - ① 저성장·저고용 : 경제성장률 저하와 함께 성장의 고용창출효과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② 탈공업화 :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는 부진
 - ③ 양극화 : 중화학공업 대 경공업, 수출부문 대 내수부문, 대기업 대 중소기업 등 산업간 및 산업부문내 기업간 생산성 및 수익성 격차 확대
 - ④ 산업공동화 가능성 : 대내 설비투자는 부진한 반면, 해외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내투자와 해외투자의 대체현상이 부분적으로 발생
- 우리 경제의 현주소는 과거의 성공적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측면의 자산을 보유한 반면, 과거의 유산이 온존하여 새로운 도약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약점을 보유
 - 높은 교육열·투자와 이로 인한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한 점은 우리경제의 강점으로 향후 발전 과정에서도 여전히 소중한 자산
 - 반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부진 및 창의적·혁신적 인재 풀이 취약

- 짧은 기간의 산업화는 국민의 높은 저축률 및, 이에 기초한, 높은 투자율에 의하여 가능하였고, 이 과정에서 단기간의 자본축적에 성공
 - 산업화 과정에서 이차적인 지원기능에 치우친 금융부문은 혁신금융을 주도할 금융인력 육성에 소홀하였으며, 자본의 과잉 시대임에도 기술과 금융의 접목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우리경제는 일부 제조업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기술적 우위로 시장을 선도하는 대기업이 존재하는 반면, 상당수 중소기업은 하청생산방식에 의존하고, 탈공업화가 진전되고 있지만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
- 제조업 중심의 발전 전략은 주요 지역에 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기능 인력을 양성해왔으나, 지역적 편중이 심하고 지역의 내재적 발전기제로 정착하지는 못함.
-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ICT산업을 육성하고 정보사회 건설에 필요한 정보인프라 구축에는 성공하였으나, 원천기술의 취약으로 핵심기술의 대외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태임.
 - 제조 및 기기 중심의 ICT산업 발전전략으로 정보통신강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콘텐츠·소프트웨어 부문의 미발달이라는 내부적 취약점
- 짧은 기간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R&D비용 급증에 따른 투자효율성 저하 문제에 당면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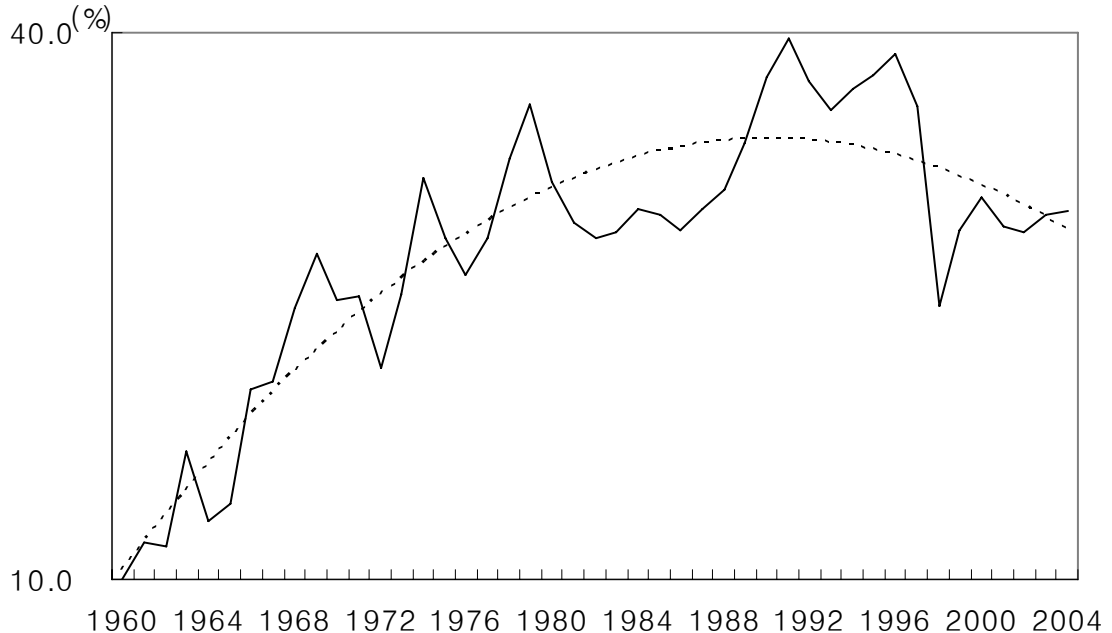
- 정부 주도로 시장경제 제도 구축에 성공하였으나, 법·제도는 여전히 세계적 수준에 미달하고 창의적 개발유인으로 작동하는 데는 미흡
- 한류 확산으로 국가이미지는 상당히 향상되었으나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며, BRICs의 성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수출시장 확대 기회이면서 우리 기업의 경쟁우위 상실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1-1〉 우리 경제의 주요 여건

	강 점	약 점
투입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교육열·투자, 우수한 인적자원 • 단기간의 자본축적 성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혁신적 인재 풀 취약 • 혁신금융기능 취약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적 대기업이 존재 • 해외시장 경험 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취약 • OEM합정에서 탈피하지 못함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제조 경험 및 능력 축적 • 전자·자동차·선박 등 일부 부문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부품·소재 부문의 취약 • 탈공업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낮음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의 발달 • 지역산업·대학의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적 편중이 심함 • 내재적 발전기제 취약
대내 환경 ·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산업과 정보인프라 발달 • 민간의 높은 R&D투자 • 정부 주도로 시장경제 제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기술 취약으로 높은 대외 의존도 • R&D비용 급증으로 투자효율성 저하 • 창의적 개발유인 미흡
대외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확산으로 국가 이미지 향상 • BRICs 성장으로 잠재수출시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기반 및 후속모델 취약 • BRICs 성장으로 경쟁우위 잠식

- 이러한 우리경제 성장패턴은 경제발전단계의 성숙과정에서 오는 구조적 요인 및 세계화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임.
- 과거 요소투입 주도의 산업화단계에서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이에 필요한 설비투자 및 산업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되면서 경제가 성장
- 경제발전으로 산업구조가 성숙됨에 따라 투자기회가 줄어들고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근로시간의 단축 등 노동공급의 증가도 둔화됨에 따라 요소투입 중심의 성장은 지속되기 어려운 여건임.

[그림 1-1] 총투자율의 장기 추세, 1960~2004



주: 총투자율(실선)은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으로 계산, 점선은 2차회귀식으로 추정된 추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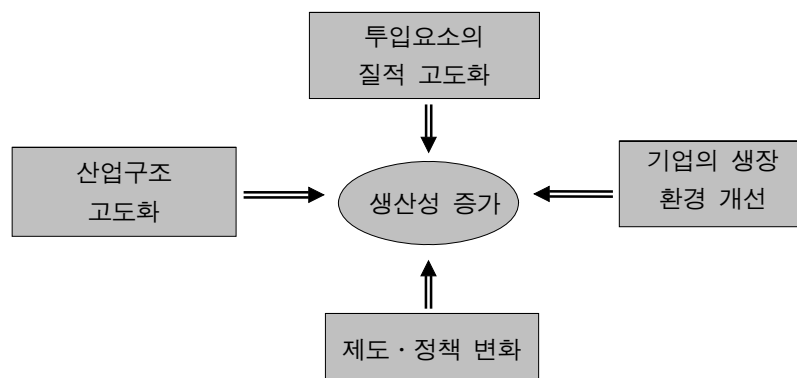
-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중국 등 저임금국가의 급부상 및 세계화의 전개 등 외부 환경 변화는 산업·기업 성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산업간·기업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ICT의 급속한 발전은 ICT산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한편, ICT를 활용하는 부문(개인)과 그렇지 못한 부문(개인) 사이의 격차를 확대시킴.
 - ICT발전은 생산과정의 분절(fragmentation)을 가능하게 하여, 다국적기업은 최적의 입지조건에 따라 국경을 넘어 생산과정을 배치하는 글로벌생산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 GPN)전략을 구사
 - ICT발전에 따른 생산과정의 분절 및 다국적기업의 GPN 전략은 후발국에게 우수한 입지환경을 조성하여 FDI 유치함으로써 지난한 기술능력축적과정을 뛰어넘어 경제발전의 도약(leapfrogging) 기회를 제공
 - 중국의 산업화는 우리 경제의 저숙련 및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의 경쟁력을 급속하게 잠식하여 구조조정 대상을 확대시키는 한편 기술집약적 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기회를 확대시켜주어, 기술변화와 함께, 산업 양극화를 초래
 - 섬유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저임금에 기반을 둔 중국에 경쟁우위를 상실하는 한편, 전자·자동차 등 기술집약적 산업은 중국시장의 확대에 힘입어 고성장을 시현
 - 산업간 및 산업내 기업간 양극화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에 이은, 이른바 「中國發 構造調整 壓力」으로 작용

- WTO 규제에 정부 직접 지원 영역은 제한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기업가정신과 창의성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되는 인력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대, 재훈련비용의 증대 등으로 재정적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지연될 경우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필수적인 지식자원의 육성에 대한 자원배분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당면하여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강점을 살리면서 새로운 제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발전 전략·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

2. 성장 전략 -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 우리경제는 요소투입 주도의 고도성장단계를 지나 생산성 중심의 혁신주도형 발전단계로 전환하는 과정
 - 혁신주도형 경제는 “투입요소의 질적 고도화와 함께,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가로 성장이 지속되어 국민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제”로, “혁신”은 생산성 증가의 원천으로 광의로 정의
 - 혁신주도형 경제에서는 성장률은 과거에 비해 낮아져도, 국민 일인당 실질부가가치는 상승하여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향상
 - 혁신주도형 경제의 외연은 ① 노동, 자본 등 투입요소의 질적 고도화, ② 서비스부문을 비롯한 기존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새로운 수요·기술에 따른 신산업의 형성, ③ 기업의 성장(生長) 환경의 개선, ④ 규제개혁, 개방화 등의 제도·정책 변화 등을 포괄

[그림 2-1] 혁신주도형 경제 : 개념도



- 노동·자본 등 투입요소의 질적 고도화는 생산성 제고의 원천 : 인적자원의 고도화 및 금융시장의 선진화는 자본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제고
- 기존 제조업 부문의 고도화 : 생산·제조기능은 비교우위를 상실하는 반면, R&D, 디자인, 마케팅 등 새로운 부문이 비교우위를 획득하게 됨으로써 주력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 원천이 고도화
- 신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의 형성 : 기존 산업의 변화와 함께, ICT, BT 등 신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어 산업구조가 질적으로 변화. 산업형성초기에 있는 부문은 선진국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으며 성장기회가 전통산업보다 더 큼.
- 탈공업화에 대응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형성시킴.
- 기업의 성장 환경을 개선 : 시장에서 진행되는 경쟁 과정에서 보다 혁신적인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원활한 기업의 탄생-성장-퇴출 과정을 통하여 경제 전체의 생산성 제고
- 규제개혁, 개방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생산성을 제고

□ 장기적 지속성장의 관건은 생산의 활력을 고취하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견지하는 데 있으며 여건·발전단계에 따른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

- 정부 개입을 지양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도록 시장기능을 활성화
- 자본집약적·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전략에 이어, 지식기반산업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

- 지역의 자생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균형발전 도모
- 부품·소재 등 산업연관관계의 기초를 강화하여 완제품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업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기업간 양극화를 극복
-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선도적 기술개발체제를 구축
- 특히, BRICs·신진개도국·이슬람권 등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경제체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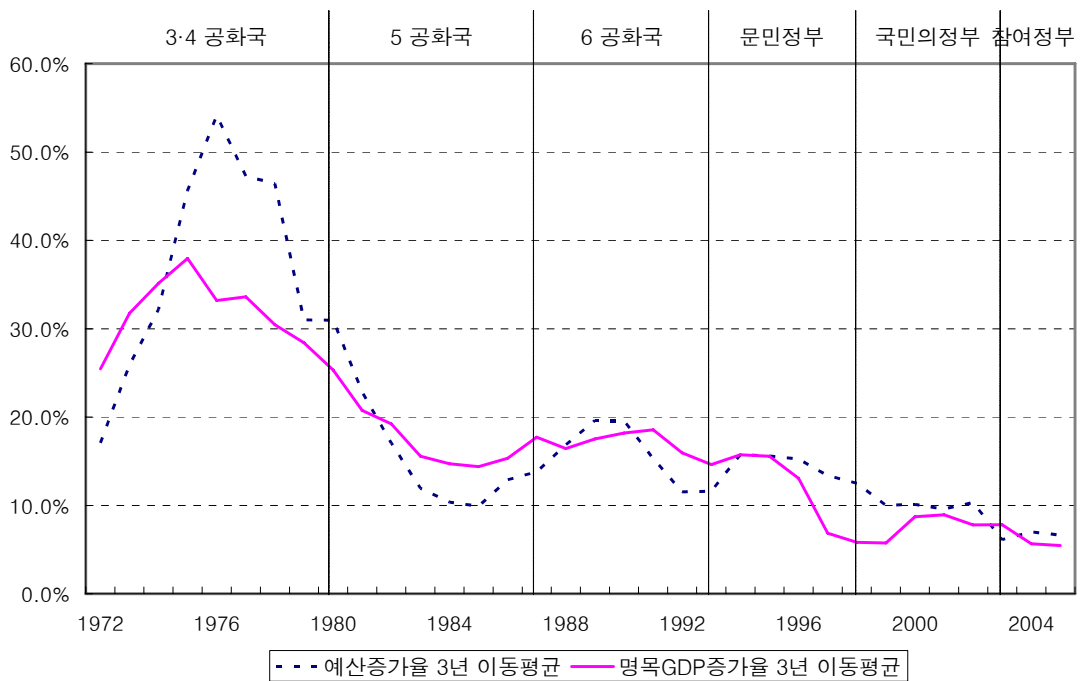
〈표 2-1〉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 (예시)

	종래의 방식	변화 방향	대응 과제
리더십	• 정부 주도, 시장 개입	• 민간 주도, 시장 자율	• 규제개혁 • 시장시스템 정착
산업발전	• 자본집약적, 제조업 중심 • 지역 불균형	• 지식기반형, 제조업·서비스업 융합 • 지역 균형	• 기술혁신 • OEM합정 탈피 • 지역클러스터를 통한 내재적 발전기제 구축
산업구조	• 완제품 중심 • 대·중소기업 양극화	• 부품·소재 부문 강화 • 기업간 네트워크 확대	• 중견기업 육성 • 중소기업 혁신역량 제고
기술전략	• 모방 및 추격 • 대기업 중심, 폐쇄형	• 원천기술·프론티어 연구 확대 • 네트워크 및 개방형	• 기술혁신체제 개선 • 공공연구기능 재정립 • 기술금융 활성화
인적자원	• 기능형 인재 • 대립적 노사관계	• 창조적 인재 • 다양한 근무형태	• 대학교육 개혁 • 평생교육체제 구축
국제분업 구조	• 미·일·유럽 중심, 수직적·산업간 분업	• 다극화된 세계체제, 수평적·산업내 분업	• 글로벌생산네트워크 구축 • 능동적 개방화

3. 재정의 역할 변화

- 그 동안 재정은 정부 주도 고도성장기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그림 3-1] GDP증가율 및 예산증가율 추이, 1972~2004



- 정부주도 경제개발 시기(1962~1992)에는 정부가 6차례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을 총동원(내·외자, 정책자금 등)하여 경제개발에 집중
 - 고도성장과 함께 재원의 70%를 차입하던 세입구조가 자립구조로 전환되고 재정규모도 크게 확대
 - 정부주도 경제발전전략은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의 자생적 발전이 지연

- 민간부문의 성장에 따라 정부의 직접개입·통제에서 민간의 창의를 강조한 민간주도 발전 전략으로 전환(1993~2002)
 - 정부의 장기계획 담당부처를 폐지하고 대외개방·규제완화를 강조한 반면, 경제·사회 부문의 구조조정은 지연
 - 외환위기 이후 타율적 구조조정에 따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
 - 예: 금융권에 대한 공적자금 168조 투입
- 참여정부(2003~)는 참여와 분권, 혁신과 통합을 바탕으로 역동과 기회의 한국 건설을 추진
 - 단기적 경기부양보다는 경제체질 개선을 통하여 미래 지속성장의 기반 구축 노력
 -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 도입 등 재정운용의 시계를 확대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 사회통합을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도록 복지분야 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
 - 균형발전,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분야별 국정과제를 재정측면에서 지원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지출구조조정 및 재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은 미흡
 - 농어촌·중소기업·교육·지방재정 등은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혜자의 집단화, 정치적 이해 등으로 획기적 조정에 한계

- 잠재성장률 · 국가채무 · 감세 논쟁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 제기

〈표 3-1〉 시기별 성장전략 및 재정운용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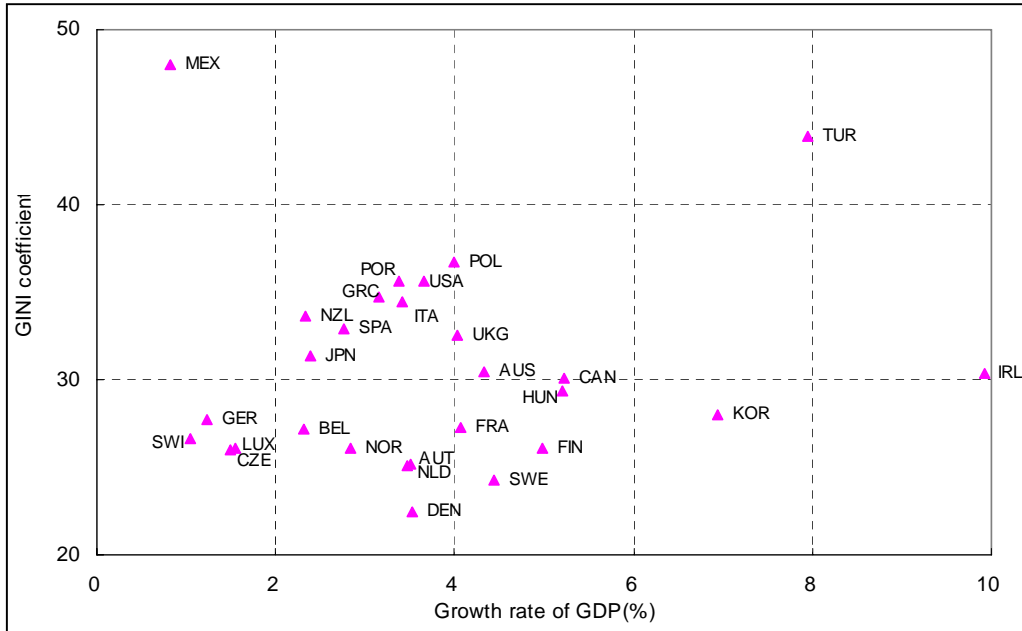
	← 국가주도 경제개발 → '62 '82 '92		← 민간주도 전환시기 → '93 '97 '02			←참여정부→ '03
계획	1~4차 5개년 계획	5~6차 5개년 계획	신경제 5개년 계획	장기계획 부재	국가재정운용 계획	
계획의 성격	자원배분	유도형	민·관 협력	단기현안 해결	종합비전 재정계획	
계획의 중점	수출, 중화학공업 육성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제화, 자유화	4대 부문 구조조정	사회형평제고 균형발전	
재정 운용의 중점	경제성장 지원 및 국방력 강화	교육·복지 분야 투자 확대, 인플레이션 구조적 개선 등 건전재정 기조유지	경쟁력 강화 위한 경제분야 투자 확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 - 복지분야 투자 확대	성장과 분배의 조화, 균형발전 추구	

자료: 기획예산처

<성장과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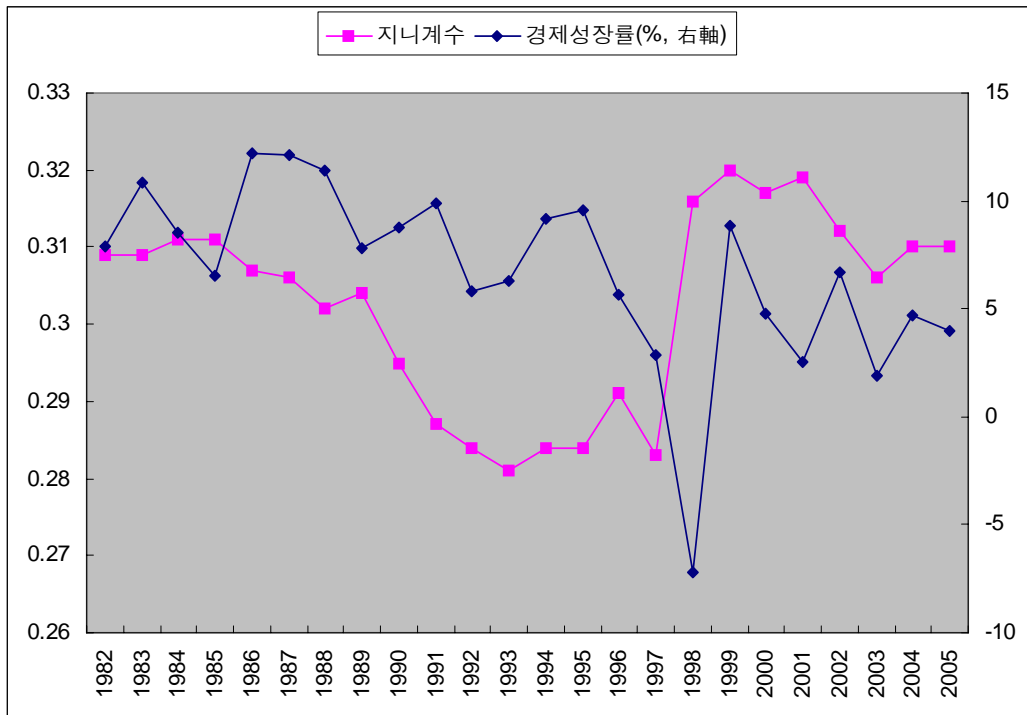
- 「시장경제」와 「복지국가」는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두개의 가치 체계
 -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혁신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경제가 성장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복지국가체제는 시장 기능을 보완·보정하여 삶의 질을 제고
 -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복지국가의 확대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
- 개방화 및 경쟁을 통한 혁신을 지향하는 시장경제체제와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사회복지체제의 확충은, 제도 설계에 따라, 상호보완적 역할 가능
 -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는 일률적이지 않으며, 각국의 특성 및 제도설계에 따라 상이한 관계가 존재
 - OECD 국가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양호한 소득분배 및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임.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소득분배가 개선되었으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크게 악화되었고, 최근에는 다시 개선되는 추세
 - 성장-복지 사이의 선순환 관계를 위해서는 복지전달체계 등 제도개선과 함께, 노동공급 확대 및 인적자본 축적 등을 통하여 성장에 기여하는 성장기여형 복지지출(growth-enhancing welfare spending)을 강화

[그림 3-2]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 - 국제비교



주: 한국은 2002년 다른 나라는 2000년 기준
 자료: OECD

[그림 3-3]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 - 한국의 추세



자료: 지니계수는 통계청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기준

4.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가. 인적자원개발 및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1)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의 경쟁력 확보

- 교육기관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교육의 경쟁력 확보
 - 학교간 경쟁을 통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체제를 개편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
 - 대학구조개혁, 대학평가제도 혁신, 고등교육 시장개방, 산학연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경쟁력 강화

2) 사회적 이동성 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저소득층 교육지원제도 정비

- 유·초등학교 등 교육초기단계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대폭 강화
 - 계층간 소득격차, 인적자원투자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취업능력을 향상

3) 가용인력의 활용도 및 질적 수준 제고

- 연구개발 인력, 전문 지식근로자 등 고급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자원 투자 및 여성·중고령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취업능력 제고 ⇒ 노동의 세대내·세대간 이동성 증진
 - 청년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생애근로기간 확대 및 정예강군 육성, 병역형평성 제고를 위한 군복무제도 개선

4) 중앙정부·지자체·민간 공조의 교육·인력개발체제 구축

- 정규교육은 물론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지자체 및 민간의 참여와 책무를 강화하여 필요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투자의 실효성·효율성 제고
 -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앙부처간 정책기획·조정기능, 각종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집행기능은 지자체로 이양
 - 교육과 복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 확대

나. 기업 환경 및 시장 제도 개선

1)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여도 제고

- 중소·벤처기업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필요
 - 중소·벤처 기업을 한국에 세계 4대 「부품·소재 글로벌 공급기지」를 구축하는 핵심 축으로 육성

- 선진국형 서비스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강화를 통해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중국경제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확립
-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적응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공급할 수 있는 인력양성체계 및 이를 위한 유인체계 구축
-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를 정책금융의 장기수혜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혁신형기업과 신규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정책금융 효율성 제고·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목표-성과 관리 강화

2) 기업 환경 개선 등 민간의 창의성·자율성 극대화를 위한 시장경제의 정착

-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 투자 관련 금융·세제 지원 및 공장입지 등 규제완화 필요
- 정부에 의한 직접적 규율에서 시장 자체의 상시적 규율 또는 정부의 시장친화적 규율로 전환
 -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정부의 직접적·일률적 규제에서 중장기적으로 시장친화적인 규제 또는 시장 자체의 규율로 대체
- 정부의 소비자정책 기능의 강화 및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
 - 시장규율의 정착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압력이 필수적
 -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의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화

3) 금융기능의 제고

-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국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나, 향후 발전 잠재력은 큰 것으로 평가
- 금융산업의 장기비전은 동북아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정립, 이를 위하여 효율적·안정적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력있는 금융투자처로 육성
 - 경쟁력 있는 금융하부구조 구축 : 포괄적 규율체계(negative system) 및 투자자보호·회계투명성·공시제도 등 시장중심구조로 전환
 - 금융시장 선진화를 통한 시장의 매력도 제고 : 채권시장의 국제화, 기관투자가 역할 제고, 국내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업무 활성화 등
 - 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역량 강화 : 겸업 금융 확대, 금융 리스크 관리·감독체계 정비, 선도 금융기관 육성, 금융소외 부문 해소, 금융감독 역량 확충 등
 -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확립, 기업규모·신용도 등 기업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기업금융체제 구축 등

다. 산업경쟁력 강화

1) 제조업 고도화 : 글로벌 생산구조의 중심권 진입

- 제조업의 투자활성화 및 투자구조 고도화에 주력
 - 투자활성화에 있어 기존의 설비투자 위주의 투자에서 R&D,

HRD, IT, 디자인 브랜드 투자 등 소프트 자원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산업별 특성에 부합한 경쟁력 확보전략 추진

- 주력산업의 산업별 특성에 맞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전략 추진
 - 자동차·기계·반도체 등 성장단계 산업은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미래형 첨단품목을 중점 개발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 성숙단계에 진입한 조선·철강·석유화학산업 등은 나노·IT 등 신기술과의 접목으로 고부가가치화 및 글로벌 경쟁력 우위 지속
 - 바이오·나노기술 등 신기술의 기존산업에의 접목을 통해 미래시장 선점과 성숙단계 주력산업의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한 재도약 촉진

□ 핵심 부품소재의 글로벌 공급기지화 적극 추진

- 원천기술이 포함된 10대 전략 부품·소재를 집중 개발하고, R&D 전 단계에 걸쳐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
- 신뢰성 평가 및 인증기준 제정 등을 통해 세계적 조달네트워크에 참여

2) 신산업 창출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구축

□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 및 제품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수출산업화

- IT·BT·NT 등 신기술 접목을 통하여 기존 제조업의 기능부

가·차별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기술의 사업화에 민간의 참여가 필수

- 기술수준과 국내역량을 고려한 민·관간 전략적 역할분담
- 부처간 전략적 역할분담에 따른 범부처적 추진을 강화하고, 기업(특히,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조기 산업화 기반을 확충

3) 한류 등 문화산업 진흥기반 확충

-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잠재력은 “한류”를 통해 입증되고 있으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창작역량 강화, 산업 인프라 구축 등 기반확충 필요
 - 한류 본류의 핵심인 문화 콘텐츠의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전문인력 양성, 투자 환경개선, 유통구조 현대화 및 수출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규제 완화를 통하여 창작 환경을 조성
 - 한류를 바탕으로 한 해외관광객 유치 등 관광산업과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

4) 새로운 성장엔진으로서 서비스산업

- 서비스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서비스 등 高생산성 부문으로 서비스산업의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
 - 제조업 등 생산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통신, 금융보험, 광고, 사

업서비스 등 생산자서비스 업종은 대형화·전문화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

- 전통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과도한 유통·개인서비스 부문은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공공성 논리로 억제하기보다 시장원리 도입, 대외개방 등으로 충족
- 국내 관광서비스 인프라의 질적 확충 및 영화,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와 관광의 연계 등을 통해 다양한 여행, 문화서비스 수요에 대처

라. 지역의 자생적 발전기제 구축

1) 혁신클러스터 형성 구축

- 현재 초기단계에 있는 혁신클러스터 사업이 내생적 발전기제로 정착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으로, 1) 수도권·대전 대비 지방의 취약한 혁신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및 재정 지원은 타당하나(empowerment), 2)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혁신주체인 기업의 역할이 관건이며(effectiveness), 3) 혁신주체 간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efficiency)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중앙부처별로 산재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역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정비하고
 - 생산이나 연구기능 등 단순 집적지에서 산학연관 혁신 주체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제도·시스템 구축해야 함.

2) 균형 성장 전략을 통한 지역의 발전 잠재력 확충

- 지역 차원에서 성장 동력을 다원화하는 것이 균형 성장 전략의 핵심임.
 - 수도권 일극 집중은 수도권의 질적 성장에 지장을 주는 한편, 지방의 침체를 초래하여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킴.
 - 지역간 경쟁을 유도하는 지역별 차별화 및 차이의 존재는 필요함.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제를 국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투자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관점에서의 시스템 디자인이 필요함.

마. 혁신주도형 성장을 견인하는 기술개발체제

- 우리나라 기술개발체제는 후발국형에서 선진국형으로 전환되는 단계로서 모방을 통한 추격(catching-up)전략과 신기술을 통한 선도(frontier)전략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임.
 - 일부 대기업은 기술개발을 통하여 경쟁우위를 창출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시장선도형 전략을 구사하는 수준임.
 - 반면, 상당수 중소기업은 외부기술의 도입·모방에 의존하여 연구·개발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생산단계로 돌입하는 후발국형 전략에 머물러 있음.
 - 일부 신기술기반기업은 대기업·연구기관의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전환기 우리나라 기술개발체제의 당면 과제는 ① 기술개발 저변을 확대하여 경제전체의 혁신역량을 강화, ② 경제발전을 견인하도록 기술개발 내용을 심화, 및 ③ R&D투자의 성장기여도 제고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기술개발 저변의 확대 : 소수의 대기업이 주도하는 민간기술개발체제에서 중소·벤처기업의 R&D투자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술금융을 포함한 기술혁신 유인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임.

- 중소기업을 혁신주체로 인식하고 시장원리에 부합하면서 시장 실패를 보정·보완하는 정책이 유효함.

○ 기술개발 내용의 심화 : 새로운 성장원천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업화연구 → 응용기술연구 → 원천기술연구로 국내산업의 혁신역량을 심화·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 이는 R&D 비용 및 위험부담이 증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하여 위험부담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음.

- 원천기술연구에서 산학협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비용의 분담과 연구 성과의 공유를 유도·조정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 정부R&D예산 배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이는 한편,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기획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 투자효율성 제고 : R&D투자에 있어서 투자효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집중하고, 기술개발 주체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함.

- 기획·기술이전·성과확산·성과평가 등 기제가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함.

- 공익성은 크나 성공확률이 낮은 연구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비 지원 및 역할 정립이 필요함.

바. ICT 개발 및 활용 촉진

- 정보통신부문(ICT)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서의 역할과 기업·산업·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동인(enabler)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지속적인 정보통신투자는 정보통신 자본의 양적 증가에 의해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음.
 - 컴퓨터·주변기기,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등 정보화 관련 투자가 전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년 24%에서 '04년 35%로 증가
 - 반면, ICT 투자의 생산성 증대 효과는 전산업에 걸쳐 아직 낮은 상태
 - 단, 정보통신 고이용산업의 생산성이 저이용산업보다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 ICT 부문의 향후 과제는 ICT 발전을 가속화하여 ① ICT 산업의 세계적 선도지위를 강화하고 ② 경제전반의 생산성 동인으로서의 역할을 제고
 - 현재 추진하고 있는 「IT839 전략」의 성공을 위해 서비스 고도화, 네트워크 확충, 관련기기/부품의 유기적 발전, 상용화 촉진 및 시장 확대
 - * IT 839전략 : WiBro 등 8대 서비스, 광대역통합망 등 3대 인프라, 이동통신·텔레매틱스 등 9대 신성장동력

- 신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높음.
 -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니즈에 의한 투자, 신규 통신·방송서비스 도입과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경쟁촉진 및 공정경쟁정책이 필요
- ICT 산업 내의 업종별, 기업규모별, 수출과 내수부문간의 양극화 완화
 - ICT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노동생산성이 모두 낮은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육성, 기업규모별 생산성 격차확대에 대한 대응, 수입의존도가 높은 ICT 부품소재 산업 육성 등을 통해 ICT 산업 부문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할 필요
- 경제전반에 ICT기술의 접목·확산을 통해 생산성 제고를 유도하고 특히, 고용효과가 큰 SW, 콘텐츠 등 ICT 서비스산업의 육성, ICT기반 직업능력 제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기회를 창출

사. 에너지 확보 및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 우리나라는 총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고유가 시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효율성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에너지확보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과 자주개발률 제고하고, 효율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원단위를 지속적으로 낮출 필요
-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고효율 산업구조로 전환 추진
 - 유전개발펀드 도입 및 유전개발 참여 등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태양·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기술혁신 등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 및 에너지분야 재원 확대

5.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원배분 방향

가. 재정투자에 대한 성과평가

- '60년대 이후 요소투입·수출·제조업 위주의 성장정책에 의한 비약적 성장을 통해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도달
 - GDP 규모 : 10위(7,930억불, '05년), 교역규모 : 12위(4,738억불, '04년)
- '90년대 들어서는 R&D 투자확대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와 함께 IT, 자동차 등 대표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
 - DRAM 매출액 : 1위(75억불, '04년), TFT-LCD 출하 : 1위(3천만개, '04년), 자동차 생산 : 5위(370만대, '05년) 등
 - 세계 500대 기업에 11개 포함(국가별 순위 : 9위).
- 이러한 성장전략은 90년대 말까지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경기둔화와 함께 성장잠재력이 약화

〈표 5-1〉 주요 기관 잠재성장률 전망

구 분	(단위 : %)		
	조세연 '06~'10	KDI '04~'10	한국은행 '05~'14
취업자	0.7	0.7	0.7~0.9
근로시간	△0.3	-	-
인적자본	-	0.8	-
물적자본	2.2	1.6~1.7	1.9~2.3
총요소생산성	2.1	1.5~2.0	1.4~2.0
잠재성장률	4.9	4.6~5.1(4.9)	4.0~5.2(4.6)

주: () 안은 전망치 평균(KDI) 또는 중립적 전망(한국은행)

-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 등의 연구개발 성과가 R&D 투자규모의 급격한 양적 확대에 부응하지 못함.
 - 공동특허권 건수(연구원 천명당, '02년) : 한국4.4, 미국 13.7, 일본 20.4, 독일 27.4, 스위스 35.8, OECD 평균 14.2
- 경쟁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시장개척 노력 부족 등에 의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 대비 기술격차 : 가전 1~2년, 자동차부품 2~3년, 금형 3~5년

〈표 5-2〉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 (개)

	2001년(A)	2002년(B)	증 감(B-A)
우리나라	72	77	5
중 국	725	787	62

<인적자원>

□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풍부한 인적자원 공급 기반 마련

- (대학교육) 대학설립 준칙주의('97), 대학정원 자율화('98) 등 대학교육 기회 확대
 - 대학진학률('04) : 한국 81.3%, 미국 63.4% 일본 49.1%
- (평생교육) 평생교육법 제정('99), 평생학습도시('01), 평생학습 축제('02)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 평생학습 참여율: ('96) 17.4% → ('04) 23.4%

□ 고급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등 체계적 인적자원 개발·활용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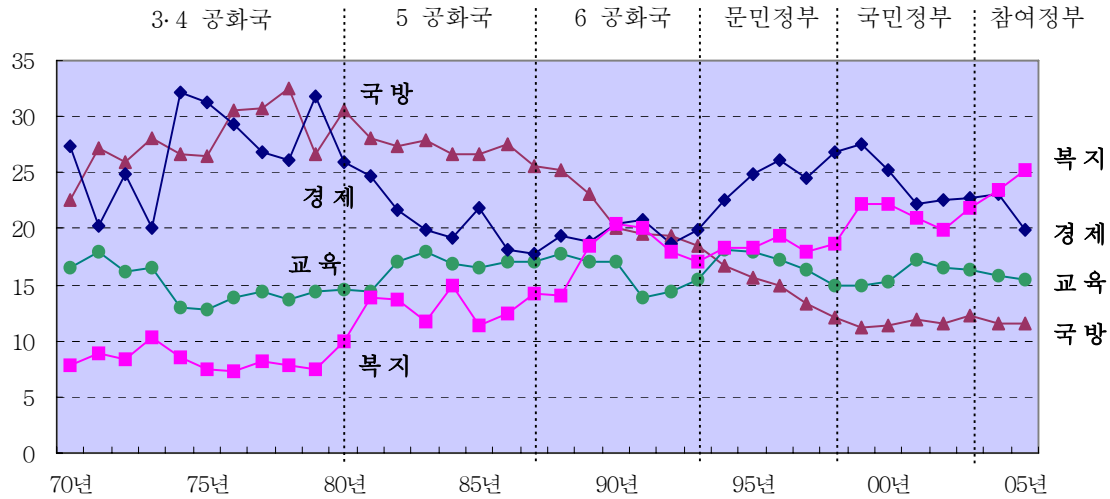
-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 약화, 사회가 요구하는 양질의 인력 공급 부족 및 분야별 수급 불균형 심각

- 대학 교육의 사회요구 부합도('05, IMD) : 60개국중 52위
- 여성·노인 등 잠재인력 뿐아니라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미흡으로 사회적 낭비 초래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95) 48.4% → ('04) 49.8%, OECD 평균 60.1('04)

나. 재정의 성장지원 전략

-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재정의 성장지원 방식은 변화, 향후 민간·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면서 보완적 투자에 집중
 - 산업화 초기 및 고도성장기 : 도로, 항만, 산업단지 등 SOC 확충, 중화학공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등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중심
 - 성숙화 단계 : 민간부문의 역량이 축적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시장기능 활성화 및 제도 보완. 아울러 인적자본 투자, 기술개발 지원 등 생산성 제고에 역점
- 1970년대 이래로 최근까지의 추세로 보면, 장기적으로 국방 및 경제 분야 재정지출은 감소 추세인 반면, 복지지출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교육 부문 지출은 15% 수준을 유지
 - 경제 구조가 성숙함에 따라 SOC·산업·농림해양 등 경제분야 지출 비중이 하락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복지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
 -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도록 각 분야별 지출의 성장기여도를 증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

[그림 5-1] 전체 재정지출 대비 분야별 지출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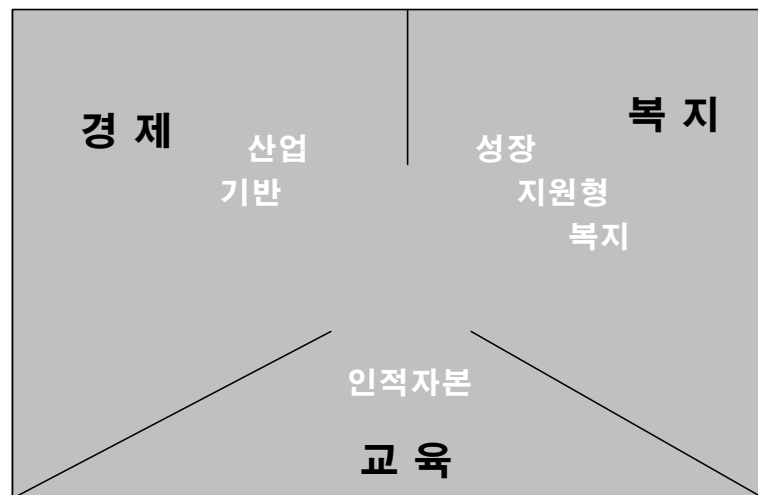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15쪽.

- “경제”부문 비중 감소가 반드시 성장지원 투자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성장지원 방식의 변화에 따른 재정지출 조정의 결과
 - 경제부문을 구성하는 산업·중소기업, 농림·해양 및 SOC 등은 경제구조 고도화에 따라 신규 투자 요구가 감소하는 추세
- 재정의 성장지원 방식은 산업에 대한 직접지원에서 노동 공급 확충 및 노동의 질 제고, 생산성 향상 및 산업 경쟁력 기반 강화 등으로 전환
 - 성장원천 : 경제 전반에 생산성 효과가 높은 R&D, 정보화 등은 성장지원 핵심 영역
 - 산업기반 : 경제 부문에서는 산업의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는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
 - 산업·중소기업 및 농림·해양 부문 지출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성장에 기여

- SOC 투자는 사회기반시설 활용에 따른 생산성이 제고 효과를 통하여 성장동력 확충에 간접적으로 기여
- 인적자본 : 고등교육,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노동의 질적 수준 및 고용가능성을 제고
- 성장지원형 복지 : 육아·보육 등에 대한 투자는 노동공급이 확대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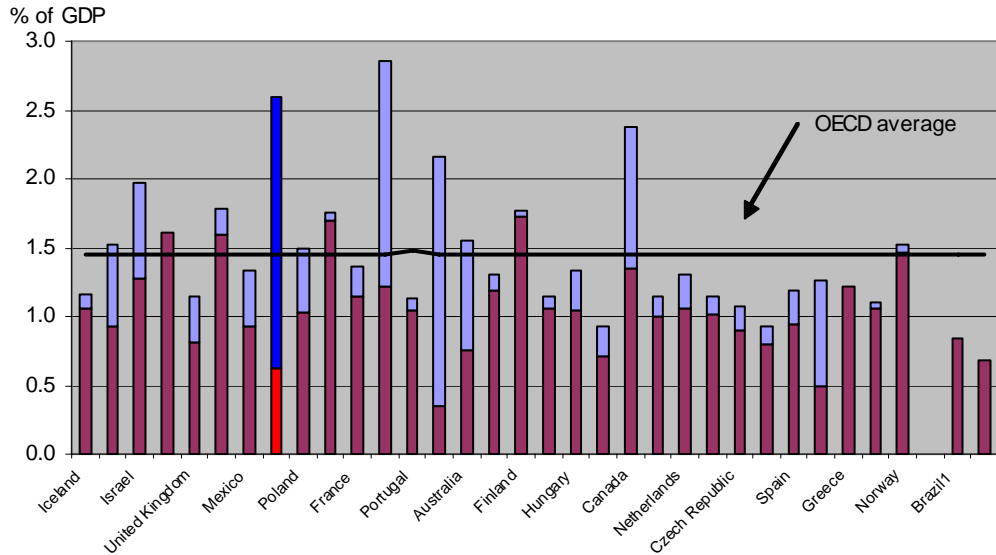
[그림 5-2] 재정의 성장지원 영역 - 개념도



- 2006~2010 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성장 관련 재정 투자는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는 같은 기간 총재정 투자 증가율 6.4%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재정 투자 구성 내역으로 보면, 성장 관련 재정 지출 구조 조정에 기인
 - 2006년 67.5%에 해당하는 산업기반 관련 투자는 향후 점진적으로 비중을 축소하는 추세
 - 산업부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및 벤처·중소기업 지원에 집중

- R&D를 핵심으로 하는 성장원천, 인적자본 고도화를 위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노동공급 확충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복지 투자 등은 증가율이 높으며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 전반적인 재원배분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세부 영역에 있어서는 정교한 사업기획 및 미세조정이 필요
 - 성장 관련 정부투자는 민간투자와의 관련성에 따라 투자 효과가 다를 수 있음.
 - 성장원천 항목에서는 R&D투자가 연평균 10.1% 수준으로 가장 높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사회적 최적 수준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R&D투자는 민간투자를 보완하면서 경제전반의 생산성 제고 효과 기대
 - 정보화 부문은 초기단계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로 산업 형성·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민간의 역량이 성숙된 단계에서는 정부의 투자 필요성은 크지 않음.
 -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고등교육 지출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나 공공부문의 고등교육 지출은 0.6%로 OECD 평균 1.1%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
 - 가장 비중이 큰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 내역은 약 2/3가 대학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지원(예: BK21, NURI 사업 등)
 -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는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그림 5-3] GDP 대비 고등교육 지출 (2003년)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6.

-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동공급 확충에 해당하는 사업들은(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 및 청소년, 실업·산재급여를 제외한 노동) 성장 관련 재정투자 중 가장 높은 증가율(복지증가율 9.1%, 성장지원형 복지 11.9%)
 - 취업능력 향상 및 양극화 해소 등 향후 사회경제적으로 필요성이 점증할 것이며, 이를 위한 투자 확대는 매우 중요
 -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투자는 민간부문과의 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산업기반 관련 투자는 세부 내역에 있어서 미세 조정이 필요
 - 70~80년대 정부 주도 경제개발시기에 도입된 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방식은 WTO체제하에서 금지보조금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시장중립적인 지원형태로 개선될 필요

- 이러한 측면에서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등 산업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
 - 다만, WTO 보조금협정 규범 하에서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어 향후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
-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은 상용화·실용화 등 직접적인 산업정책 영역보다는 민간투자를 구축하지 않고 시장실패가 큰 부분에 있어 시장중립적 원천기술 부문에 집중
- SOC 분야는 민간투자를 유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

〈표 5-3〉 산업·중소기업 분야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산업·중소기업 분야 (증가율)	123,955	125,085	123,692	125,056	127,593	0.7
* 금융지원 제외시	84,305	90,567	91,270	94,680	98,632	4.0
○ 산업 진흥·고도화	35,181	35,331	35,862	36,222	37,834	1.8
○ 무역 및 투자유치	4,413	3,890	4,091	4,172	4,363	△0.3
○ 에너지 및 자원개발	37,672	43,118	42,569	44,795	46,292	5.3
○ 산업금융지원	39,650	34,518	32,421	30,376	28,962	△7.6
○ 산업기술지원	3,947	4,905	5,243	5,832	6,255	12.2
○ 산업·중소기업 일반	3,092	3,323	3,506	3,660	3,887	5.9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 175쪽.

〈표 5-4〉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 비중 추이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단위 : 조원)

구 분	'98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 민간투자(A)	0.5	1.0	0.6	1.2	1.2	1.7	2.6
▪ SOC 재정투자(B)	12.7	15.2	16.0	16.0	18.4	17.4	18.3
▪ A/B (%)	3.9	6.6	3.4	7.5	6.6	9.8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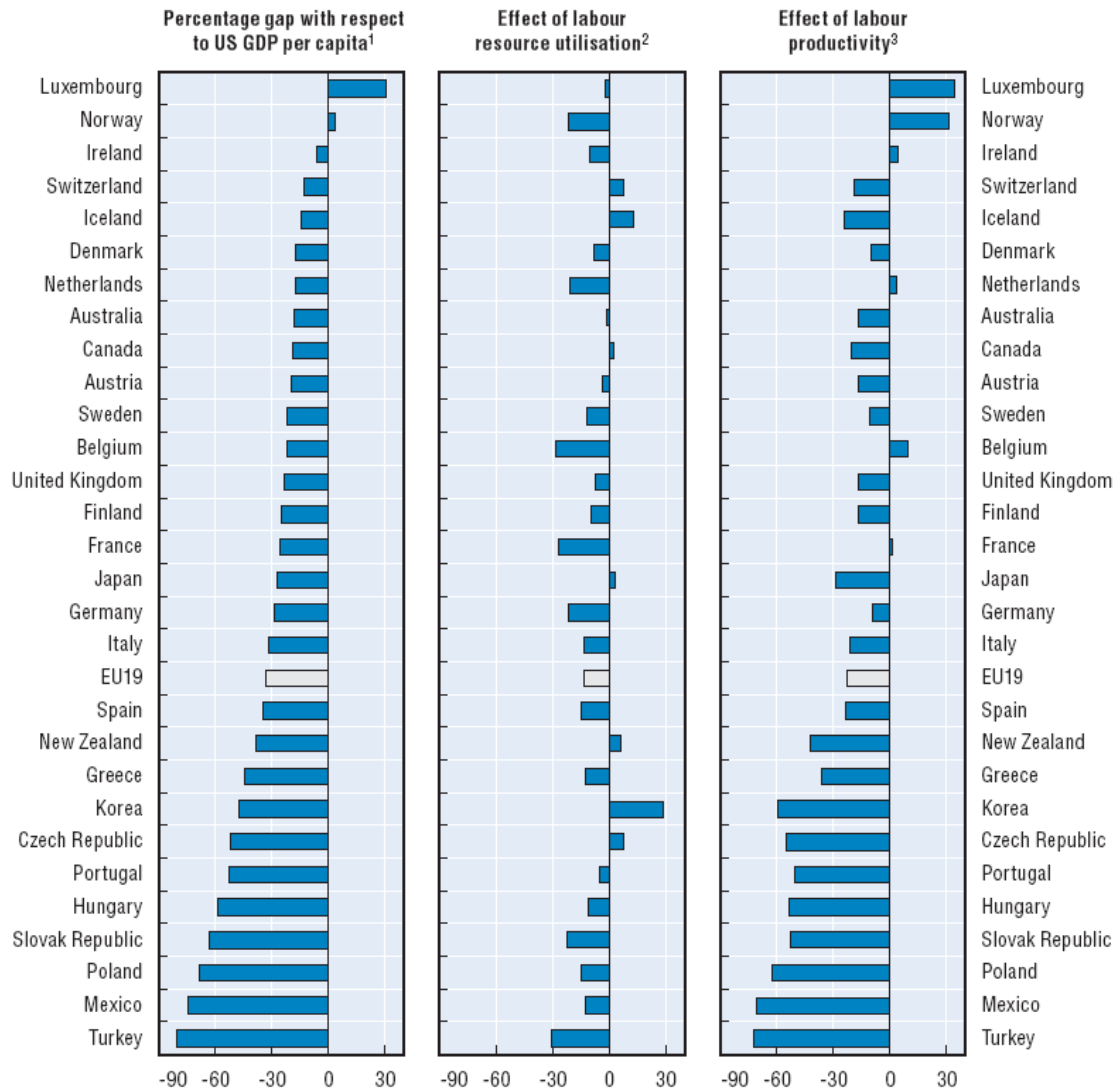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 111쪽

- 재정투입과 함께 제도혁신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지식경제 지표 구성에 있어서 IT, R&D, 교육 등 인프라 부문은 G7 국가에 대등한 수준이나 경제 환경 및 제도에서는 상당한 격차를 보임(참고자료 3 참조).
 - 제도개혁 자체로도 성장률 제고 효과 존재
 - 정부 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획을 강화
 -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복지 전달체계의 구축이 선결되어야 하며,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재정지원을 확대
 -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친기업 환경 조성 및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
 - 우리 경제는 향후 상당기간 동안 추격성장의 여지가 많음 : 노동생산성 격차의 상당 부분은 자본축적 격차에 기인하며(참고자료 2 참조), 따라서 기업 투자 활성화는 성장동력 확충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

- FTA 체결, FDI 유치 등 개방화 전략 : 금융·교육 등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능동적인 개방화 추진
 - 능동적 개방화 전략의 하나로 고부가가치형 FDI 유치 : 성장 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면서 투자 유치 가능성이 있는 산업군을 선정하고 유치역량을 집중
 - 생산자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 비중을 제고하는 한편, 유통서비스 및 개인서비스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서비스 산업 내 구조고도화가 필요(참고자료 4 참조)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개선을 위해서는 제반 국내규제의 대폭적인 개선과 글로벌 기준의 전면적 수용이 필요
 -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통한 선진서비스산업의 유입이 국내서비스산업의 체질과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FTA는 중대한 의의가 있음.
- 고등교육제도 개혁, 외국인 근로자 및 고급해외 인적자원 활용 등을 위한 제도 개선
 - 연구개발 인력, 전문 지식근로자 등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대학과의 공동프로그램 활성화, 전문분야 초일류대학원 유치 등 대학시장의 개방·국제화 지속 추진

<참고자료 1> 생산성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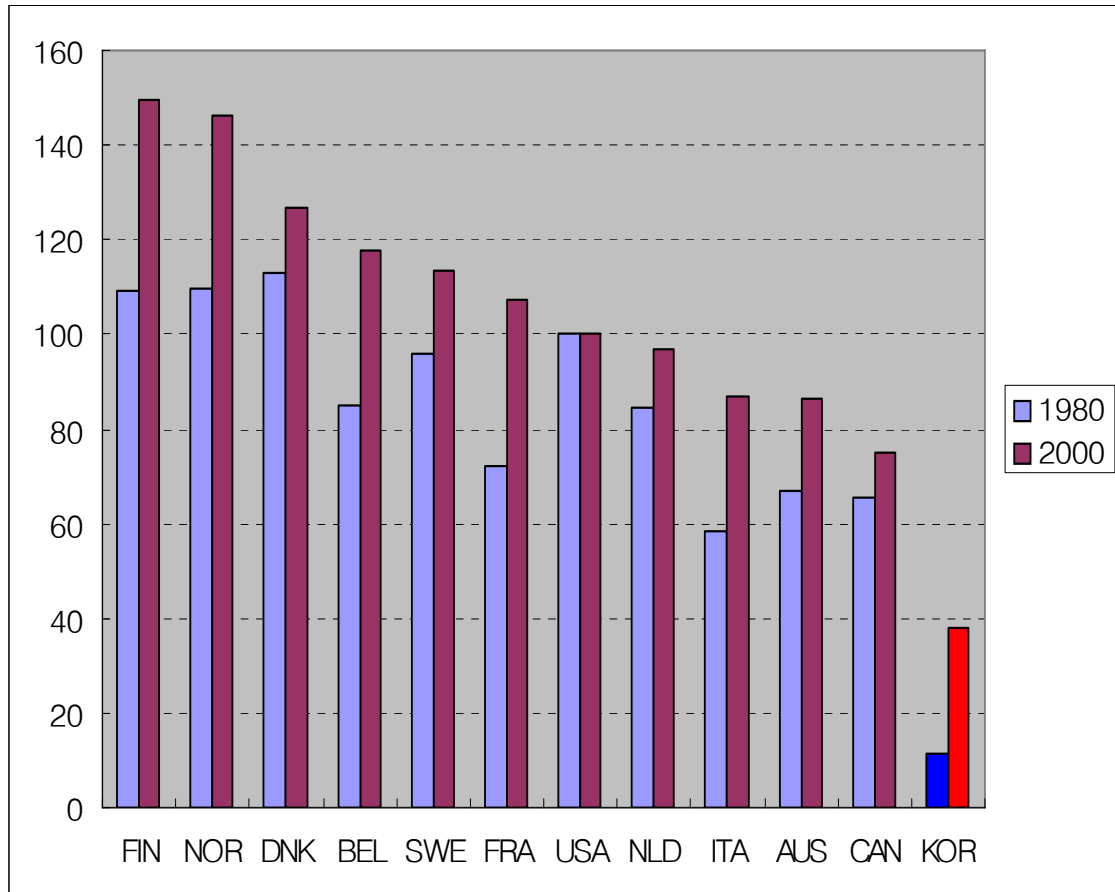
□ 미국을 100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일인당 GDP는 -47.7%, 노동시간은 28.6%, 노동생산성은 -59.3%



1. Based on 2005 purchasing power parities (PPPs). In the case of Luxembourg, the population is augmented by the number of cross-border workers in order to take into account their contribution to GDP. Data for Greece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25 per cent upwards revision to the level of GDP announced in 2006.
2. Labour resource utilisation is measured as total number of hours worked divided by the population.
3. Labour productivity is measured as GDP per hour worked.

자료: OECD (2007)

<참고자료 2> 자본장비율 국제 비교 (미국 = 100)



자료: OECD STAN DB를 이용하여 계산

<참고자료 3> G7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 지식경제 발전 지표

□ 세계은행은 128개국을 대상으로 국제비교 가능한 지식경제지수를 발표

- ① 경제 환경 및 제도, ② 교육 및 인적자원, ③ 기술혁신시스템, ④ 정보통신 기술·인프라 등 4개 영역의 80개 지표로 구성
- 개별 지표는 최하위국 0점 및 최상위국 10점으로 한 상대평가 값으로 구성되며, 개별 지표의 중요성을 감안한 가중평균으로 4개 영역 지수 및 총지수를 계산

□ 우리나라는 요소투입 및 경제 인프라에 있어서는 G7국가와 대등한 반면, 경제 제도 및 운영시스템에 있어서는 G7국가에 상당히 뒤져 있음.

- 총자본형성, 대학진학률, GDP대비R&D투자, IT관련 인프라 등 요소 투입 및 H/W 인프라에 있어서 G7국가를 앞서거나 대등한 수준
- 반면, 국가지배구조와 관련된 대부분의 지표에 있어서는 G7국가에 뒤져있으며, 교육·기술혁신·ICT 영역에 있어서도 활용 측면에서 취약

<지식경제지표 비교 - 한국 대 G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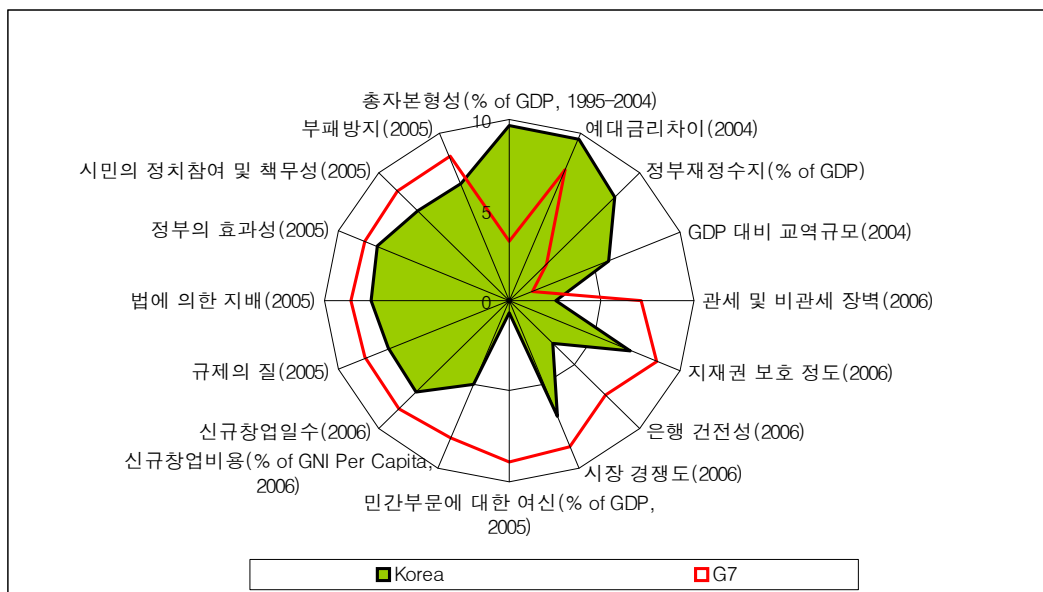
	지식경제지수	경제 환경 및 제도	교육 및 인적자원	기술혁신 시스템	정보통신 기술·인프라
한 국	7.60	5.70	7.57	8.30	8.82
G7	8.50	8.01	8.43	8.90	8.66

자료: 세계은행(www.worldbank.org/k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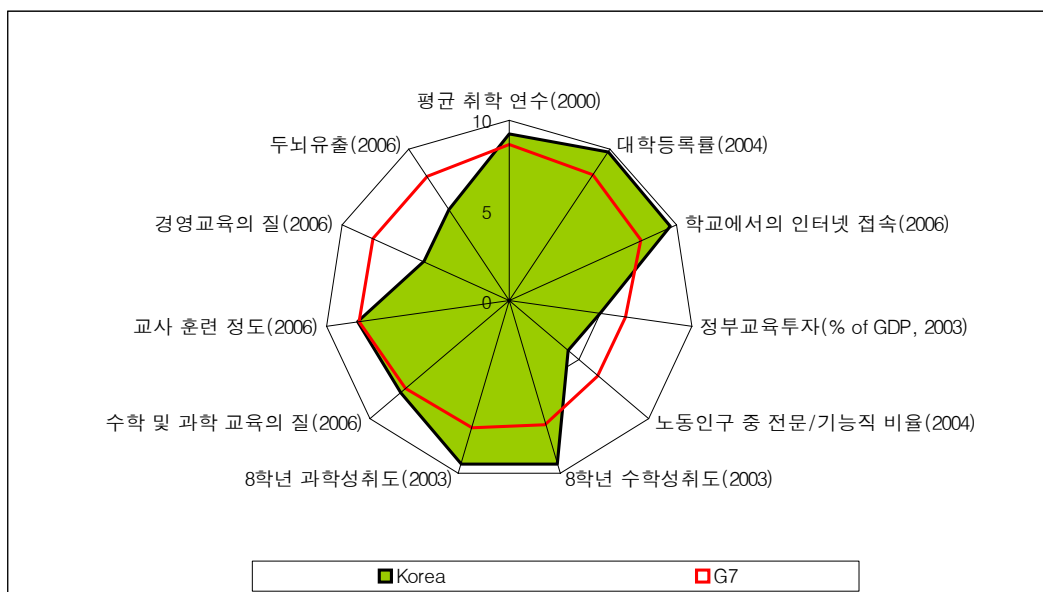
□ G7국가들에 뒤지지 않도록 주요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 격차 축소 및 시스템 운영 효율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

□ 지식경제 주요 지표 - 한국 대 G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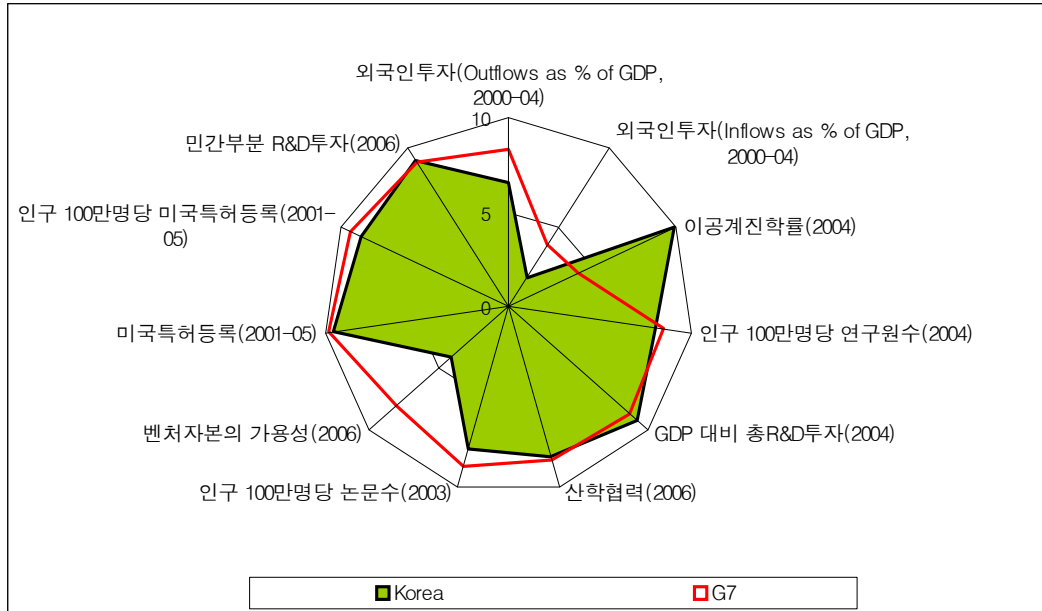
① 경제 환경 및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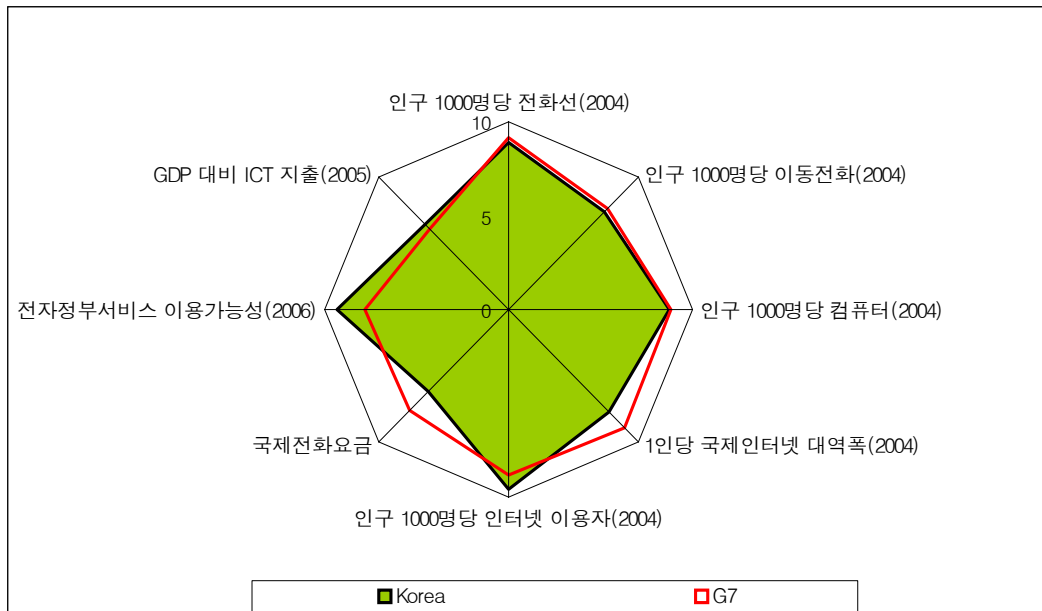
② 교육 및 인적자원



③ 기술혁신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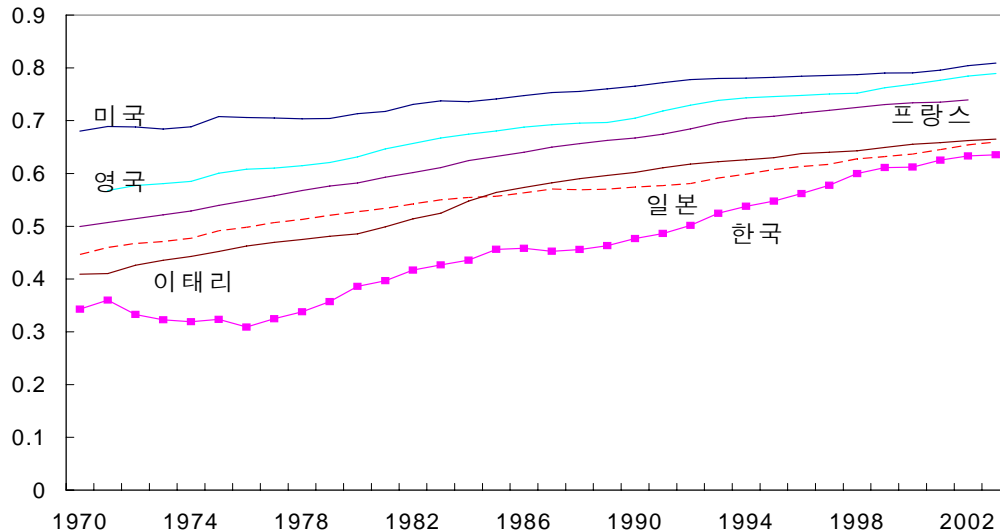
④ 정보통신 기술 · 인프라



<참고자료 4> 우리경제의 서비스화 추세 및 향후 과제

- 우리경제의 서비스화는 빠르게 이루어져 고용구조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경제내 비중이 확대되어 2005년 현재 부가가치의 56%, 고용비중의 65%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성장하였음.
 - 그러나, 생산성이 높은 생산자서비스, 교육·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 보다는 영세업자 위주의 소매업·음식숙박업을 포함한 유통서비스와 개인서비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주요국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



자료: 한국은행

- 우리경제의 서비스화는 향후 보다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

-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에서와 달리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이 GDP비중보다 훨씬 빠르게 확대되어 전반적인 생산성 수준이 제조업이나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고 생산성 증가도 부진함.
 - 서비스산업 중에서는 생산자서비스의 비중 확대가 가장 특징적이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경제 내 비중이 5~10%p 낮은 수준에 있으며, 제조업 생산에 투입되는 서비스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제조업-서비스업간 산업연관도가 그리 높지 않음.
- 국민경제 내에서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향후 상당기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생산성 제고가 관건임.
 - 2003년 우리나라 전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36%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서비스부문의 저생산성에 기인함.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2003년)〉

	한국	대만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전산업 (미국=100)	35.9	43.6	61.3	68.2	75.4	100.0	101.3
서비스산업 (제조업=100)	54.8	125.4	76.6	92.4	82.7	83.5	85.0

주: 근로자 일인당 부가가치를 각국 국민계정에서 계산하여 명목환율로 전환.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 국제비교』, 2005.

- 생산자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 비중을 제고하는 한편, 유통서비스 및 개인서비스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서비스산업 내 구조고도화가 필요함.
 -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의 서비스화, 아웃소싱 활성화, 소

프트화 등으로 IT기반의 유통·물류, e-비즈니스, 디자인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 성장할 전망이다.

* 지식기반서비스 : 생산자서비스(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광고, 사업서비스, 방송), 사회서비스(교육, 의료보건, 사회복지), 개인서비스(영화 및 연예, 기타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중 지식집약도가 높은 일부 업종을 지칭

- 지식기반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추진해야 함. 지식술집약도를 제고하고 수요기업 및 소비자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서비스산업 고용구조의 국제비교 (2003년)〉

(단위: %)

	유통 서비스	생산자 서비스	사회 ²⁾ 서비스	개인 ²⁾ 서비스	서비스 산업전체
선진국 ¹⁾ 평균(A)	20.3	16.8	24.1	13.2	73.3
우리나라(B)	23.5	11.2	12.6	16.2	63.5
B-A	+3.2	-5.6	-11.5	+3.0	-9.8

주: 1) 미국, 영국, 프랑스(2002년), 이태리, 일본

2) 일본을 제외한 4개국 평균

자료: 한국은행

□ 그동안 제조업중심으로 형성된 ‘성장→고용→소득→소비’의 순환구조에 사회서비스부문의 고용 확대로 성장을 유발하도록 순환구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생산성이 낮은 도소매 및 개인서비스에 고용이 집중되고 사회복지제도의 취약으로 사회서비스부문의 취업 비중이 낮은 실정임.

- 여성취업의 증대, 고령화 등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육아, 보건 등에 관련된 사회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해 성장과 고용 창출을 도모
-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여 보건복지부문은 서비스부무내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료복지서비스 등의 규제 및 법제도 개선, 정보공개 등이 필요하고 대외개방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의 국제 비교〉

(단위: %)

구 분		OECD 평균	독 일	네덜란드	스웨덴	미 국	한 국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	전 체	24.0	24.8	27.6	33.4	24.8	13.8
	여 성	35.5	35.7	39.7	52.9	36.2	17.7
	남 성	15.1	16.4	19.0	15.9	14.9	11.1
사회서비스업에서의 여성비율		65.8	62.9	59.8	74.8	67.6	52.8

주: 한국은 2003년이며 나머지 국가는 1998년

자료: 1) OECD, Employment Outlook, 2001. 2) 한국은 『경제활동인구조사』.